광주시-시의회 '갈등' 봉합 수순

집행부-의장단 내일 회동 입장 정리키로

강시장도 "충분히 협의해야" 화해 제스처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임시회 폐회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일방통행식 정책발표'를 지적한 데 대해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던 양측의 갈등이 조만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이 오는 4일 회동을 갖고 의장 폐회사 발언에 따른 시청 고위간부 반발로 빚어진 갈등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만찬 형태로 이뤄질 이날 회동에는 시 집행부 측에서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 의회 측에서는 부의장단과 운영위원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광주시가 시의회 측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폐회사 발언 갈등' 사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회동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그동안 쌓였던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 윤봉근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집행부 측이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자연스럽게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동 자체가 화해의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강 시장도 이날 오전 정례조회에서 "의회와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서로 반성하고 풀어야 한다"며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화해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는 의회를 경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적지 않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춘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총회를 통해 집행부 측에 공식사과와 해명, 책임자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놓은 만큼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발전을 꾀하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형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 사태는 윤봉근 의장이 지난달 20일 제1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최근 상무소각장 이전과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등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돼 아쉽다"고 밝힌 데 대해 광주시청 간부진이 이에 대한 반발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다시 반박성명을 채택하면서 빚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왼쪽)과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2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방안 등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대북제재 원칙' 공감

"비핵화 초점 맞춰 시행돼야"

新행정명령 발표 즉시 발효

한·미 양국은 2일 현재 미국이 검토중인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검토중인 대북 추가제재 조치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겨냥하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고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지금 진행하는 제재들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천안함 사건도 천안함 사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방한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이날 오전 시내 모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위해 검토중인 대북 행정명령은 이달중으로 발표되며 발표 즉시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1~4일 아인혼 조정관 일행의 한.일 방문을 마친 뒤 내부 검토를 검쳐 관보를 통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수주 및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는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기업 및 개인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핵확산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 및 개인이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주요국 정부에도 금융기관들이 그런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사업, 전남 유치에 온 힘"

정순남 전남도 정무부지사

"현재 용역조사 중인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여건이 좋은 영광에 유치하는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 전남으로 끌어오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정순남 전남도 신임 정무부지사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이 열악하고 농업 위주다 보니 제조업 등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녹색성장이나 관광·문화예술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전남은 이런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특화산업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지사는 "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박준영 지사와 전남도의 방향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다"면서 "수도권의 땅값 여파가 충청도까지 왔는데 전남지역은 땅값이 싼 만큼 지역 대학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녹십자 백신공장의 화순 유치 사례를 들면서 "원래 화성에 투자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화순으로 가져왔다"면서 "당시에는 좋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화순공장 150명 인력 중 100명을 지역에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지사는 "중앙정부 근무시에도 지역산업과장과 지역경제국장 등을 하면서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지방사정을 비교적 알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나주 출신인 정 부지사는 행정고시 26회로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경제국장과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2년 임기를 마치면 지식경제부로 복귀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공공기관 금융부채 181조원

6년간 110조원 늘어…LH공사 71조 최대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는 181조4000억원에 달하며, 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금융부채가 75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의 '2009 회계연도 결산분석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늘어나는 장·단기 차입금 및 사채는 만기 상환까지 정부의 우발채무 및 공공기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성 부채는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장.단기 차입금, 금융리스, 사채 등 외부조달 자금을 의미하며, 작년 말 현재 286개 공공기관 중 93개 기관이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2004년 71조3천947억원에서 매년 평균 22조원씩 증가, 최근 6년간 무려 110조28억원(증가율 154%) 늘었다.

금융부채 상위 25개 기관은 ▲토지주택공사(74조9811억원) ▲전력공사(21조9926억원) ▲도로공사(20조6480억원) ▲가스공사(15조5108억원) ▲철도시설공단(11조332억원) ▲철도공사(7조3420억원) ▲석유공사(4조8847억원) ▲한국수력원자력(2조9057억원) ▲인천공항공사(2조7173억원) 등이었다.

상위 25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180조1천585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금융부채의 99.32%를 차지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2007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주택분양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금융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25개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6년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2004년 79.55%에서 2009년 142.3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 기관의 자본은 31.12% 포인트 증가에 그쳐 자산 구성이 자본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부채비율 상위기관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233.7%)를 비롯해 컨테이너부두공단(21846.7%), 인천종합에너지(761.4%), 토지주택공사(524.5%), 가스공사(344.4%) 순이었다. /연합뉴스

ROTC도 '禁女의 벽' 허문다

국방부 올 하반기 여성 학군사관 60명 선발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험적으로 60여명의 여성 학군사관(ROTC) 후보생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여군 장교가 되려면 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 졸업 후 여군사관을 지원해야 했으며, 학군사관 후보생 과정은 여성에게 개방돼 있지 않았다.

국방부는 학군단 설치를 희망하는 여자대학교 중 1개 대학(30명)과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등 학군단 편성 대학 중 6개 시험대학(30명)을 선정해 자유경쟁으로 여성후보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의 선발기준과 교육훈련, 임관 후 진로 등은 남성 후보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 당국은 시험대학 선정을 9월에 마치고 여성지원자를 9~10월에 모집해 11월 말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군단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의 2학년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합격자는 2년간 총 175시간의 군사교육과 12주의 입영훈련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영하며 의무복무기간은 2년4개월이다. /연합뉴스